

제2장

민생경제·일자리

제1절 민생경제

제2절 일자리

제2장

민생경제·일자리

제1절

민생경제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민생경제 구조적 여건

(1) 높은 제조업 비중과 주력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 경남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38.4%로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그중에서도 조선, 자동차, 항공, 기계공업 등 주력 산업 비중이 16.9%로 매우 높음
-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43.9%를 차지

(단위 : 십억원, %)

〈표 4-2-1〉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금액 및 비중

구분	전국		경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부가가치	1,736,589	100.0	102,309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4,584	2.0	4,149	4.1
광업	2,611	0.2	110	0.1
제조업	505,165	29.1	39,307	38.4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23,431	1.3	2,209	2.2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제조업	16,481	0.9	505	0.5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14,514	0.8	855	0.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91,724	5.3	3,473	3.4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79,109	4.6	9,030	8.8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172,702	9.9	5,985	5.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07,204	6.2	17,251	16.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4,545	1.4	2,215	2.2
건설업	102,204	5.9	6,562	6.4
도매 및 소매업	139,334	8.0	5,094	5.0
운수 및 창고업	55,026	3.2	2,623	2.6
숙박 및 음식점업	42,910	2.5	2,392	2.3
정보통신업	81,504	4.7	1,388	1.4
금융 및 보험업	104,414	6.0	4,276	4.2
부동산업	135,908	7.8	6,373	6.2
사업서비스업	166,129	9.6	5,856	5.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6,537	6.7	8,688	8.5
교육 서비스업	90,546	5.2	5,456	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960	4.7	4,886	4.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53,210	3.1	2,935	2.9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2018년 잠정치)

●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경남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4,490개로 종사자는 총 137만 8,74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상용근로자는 88만 7,226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4.4%를 차지

- 제조업 사업체는 3만 6,668개로 전체 사업체의 13.4%를 차지하는 반면, 종사자 수는 42만 3,853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7%를 차지하여 제조업 사업체가 많은 종사자를 고용

– 제조업 상용근로자는 36만 8,517명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86.9%를 차지하여,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음

(단위 : 개, 명)

〈표 4-2-2〉

경남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합계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전산업	274,490	1,378,742	887,226	146,650	226,559	57,607	60,700
농림어업	336	3,267	2,429	751	0	0	87
광업	89	828	769	29	30	0	0
제조업	36,668	423,853	368,517	20,999	27,030	6,189	1,11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7	4,169	4,038	63	46	20	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99	8,593	7,919	342	280	43	9
건설업	9,973	85,111	44,837	27,862	5,328	1,330	5,754
도매 및 소매업	65,162	169,269	67,193	17,077	58,356	16,222	10,421
운수 및 창고업	20,856	58,738	29,417	3,808	19,279	504	5,730
숙박 및 음식점업	59,762	147,783	30,309	30,386	58,563	26,359	2,166
정보통신업	1,163	10,074	8,456	888	441	43	246
금융 및 보험업	2,849	37,333	19,642	852	335	28	16,476
부동산업	9,130	27,166	17,226	1,405	6,231	559	1,7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93	32,796	27,369	1,734	3,361	248	8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57	40,333	29,885	5,544	2,263	332	2,3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60	45,350	39,021	6,193	0	0	136
교육 서비스업	13,085	93,514	66,674	10,544	10,644	944	4,7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40	112,981	91,826	9,926	7,072	198	3,9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360	23,442	7,829	4,767	6,518	1,569	2,75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051	54,142	23,870	3,480	20,782	3,019	2,991

주 : 기타 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 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또는 그 외 기타 종사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 분석).

(2) 높은 소규모 영세 사업체 비중

● 종사자 및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경남 전체 사업체 중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사업체는 148개로 13만 5,479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가 300명 미만이고 매출액도 3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 27만 3,305개(99.6%), 종사자가 114만 4,686명(83.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300명, 3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체 73개에 8만 4,534명이 종사하고 있고, 300명, 300억 미만 중소기업 3만 6,126개(98.5%)에 28만 7,508명(67.8%)이 종사하고 있음

(단위 : 개, 명)

〈표 4-2-3〉

경남 전산업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구분	매출액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합계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300명 이상	300억 이상	148	135,479	126,014	8,724	4	0	737
	300억 미만	42	17,569	11,867	4,208	3	0	1,491
300명 미만	300억 이상	995	81,008	71,041	3,798	7	0	6,162
	300억 미만	273,305	1,144,686	678,304	129,920	226,545	57,607	52,31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단위 : 개, 명)

〈표 4-2-4〉

경남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구분	매출액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합계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300명 이상	300억 이상	73	84,534	83,169	1,365	0	0	0
	300억 미만	3	1,150	896	253	1	0	0
300명 미만	300억 이상	466	50,661	49,638	1,003	3	0	17
	300억 미만	36,126	287,508	234,814	18,378	27,026	6,189	1,10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업체당 평균 매출액

- 경남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산업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14억 5,200만원인 반면, 경남은 11억 3,800만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에도 전국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42억 5,700만원에 비해 경남은 41억 4,100만원으로 낮음

〈표 4-2-5〉

산업별 사업체 수와
매출액,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단위 : 개, 십억원, 백만원)

구분	전국			경남		
	사업체 수	매출액	업체당 평균 매출액	사업체 수	매출액	업체당 평균 매출액
전산업	4,019,872	5,836,148	1,452	274,490	312,295	1,138
농림어업	3,880	12,361	3,186	336	918	2,732
광업	2,001	4,434	2,216	89	237	2,665
제조업	433,684	1,846,038	4,257	36,668	151,847	4,14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830	143,085	78,189	157	9,881	62,93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533	24,651	2,889	799	1,923	2,407
건설업	138,478	403,857	2,916	9,973	15,533	1,558
도매 및 소매업	1,022,739	1,233,442	1,206	65,162	47,605	731
운수 및 창고업	386,919	189,915	491	20,856	7,310	350
숙박 및 음식점업	747,577	141,223	189	59,762	7,882	132
정보통신업	42,887	156,740	3,655	1,163	2,728	2,345
금융 및 보험업	43,514	804,362	18,485	2,849	22,899	8,038
부동산업	152,083	128,665	846	9,130	10,106	1,1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4,251	192,656	1,848	4,793	3,373	70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8,177	79,998	1,173	3,857	2,868	7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488	124,697	9,985	1,060	8,560	8,076
교육 서비스업	185,275	122,227	660	13,085	6,682	5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5,909	128,312	879	9,340	7,715	8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8,797	48,233	406	7,360	1,686	2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0,850	51,253	128	28,051	2,544	9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 경남은 대기업 상용근로자의 임금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2019년 4월 기준 경남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5.4%로 전국 기준 78.0%보다 낮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큼

(단위 : 천원, %)

〈표 4-2-6〉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남	중소규모 (5~299)	2,246	2,366	2,414	2,476	2,565	2,678	2,774	2,887	3,021
	대규모 (300 이상)	3,211	3,292	3,415	3,486	3,705	3,840	3,765	3,849	4,008
	비중	69.9	71.9	70.7	71.0	69.3	69.7	73.7	75.0	75.4
전국	중소규모 (5~299)	2,329	2,467	2,573	2,654	2,739	2,833	2,950	3,074	3,219
	대규모 (300 이상)	3,087	3,180	3,323	3,500	3,698	3,778	3,829	3,997	4,129
	비중	75.5	77.6	77.4	75.8	74.1	75.0	77.1	76.9	78.0

주1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시점은 각연도 4월 기준.

주2 : 사업체 규모는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4) 높은 자영업자 비중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

- 경남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30.5%로 전국 24.6%에 비해 높은 수준
-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경남 역시 2015년 30% 아래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상용근로자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 다시 자영업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9년 다시 조정을 받는 상황

(단위 : %)

〈표 4-2-7〉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남	32.3	32.8	33.2	33.0	30.9	29.6	31.8	32.7	32.9	30.5
전국	28.8	28.3	28.2	27.4	26.8	25.9	25.5	25.4	25.1	2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

- 2018년 경남의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명, %)

〈표 4-2-8〉

산업별 취업자 수와
자영업자 수,
자영업자 비중

구분	전국			경남		
	전체 취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비중	전체 취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비중
전산업	26,978,837	6,820,945	25.3	1,748,384	575,531	32.9
농림어업	1,443,053	1,305,378	90.5	190,965	171,801	90.0
광업	18,598	860	4.6	1,615	0	0.0
제조업	4,494,089	531,320	11.8	418,562	43,707	10.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783	1,042	1.5	4,712	40	0.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1,490	12,866	9.8	11,162	1,316	11.8
건설업	2,056,551	419,803	20.4	93,724	29,859	31.9
도매 및 소매업	3,716,923	1,413,147	38.0	186,574	88,627	47.5
운수 및 창고업	1,410,557	611,741	43.4	93,761	47,725	50.9
숙박 및 음식점업	2,217,967	862,279	38.9	151,782	80,540	53.1
정보통신업	838,936	88,000	10.5	15,530	2,092	13.5
금융 및 보험업	846,515	23,575	2.8	38,995	938	2.4
부동산업	527,992	186,072	35.2	25,232	9,237	3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86,246	172,743	15.9	33,336	7,510	22.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16,937	114,352	8.7	58,971	9,566	16.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36,585	0	0.0	92,155	0	0.0
교육 서비스업	1,851,771	329,638	17.8	104,564	22,464	2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05,888	120,070	5.7	121,700	8,388	6.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35,475	146,763	33.7	26,852	10,835	4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23,517	480,338	39.3	76,556	40,857	53.4
기타	51,963	957	1.8	1,637	29	1.8

주1 :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의미함.

주2 : 2018년 연간 자료는 1분기, 2분기 데이터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1, 2분기,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 분석).

(5)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경제 양적 규모

●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접근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112개로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23,744개의 4.7%를 차지
 - 사회적경제기업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사회적기업 178개(4.6%), 협동조합 730개(4.3%), 마을기업 120개(7.5%), 자활기업 84개(6.9%)로 구성
 - 시군별로는 창원시(293개), 김해시(156개), 진주시(111개), 양산시(82개), 거창군(55개) 순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표 4-2-9〉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총합계
	합계	인증	예비	합계	사회적	일반			
전국	3,901	2,435	1,466	17,037	1,787	15,250	1,592	1,214	23,744
경남 (비율)	178 (4.6)	117 (4.8)	61 (4.2)	730 (4.3)	113 (6.3)	617 (4.0)	120 (7.5)	84 (6.9)	1,112 (4.7)
창원시	56	40	16	214	49	165	6	17*	293
김해시	24	16	8	119	15	104	5	8	156
진주시	13	8	5	86	7	79	6	6	111
양산시	20	10	10	55	14	41	5	2	82
거창군	10	9	1	30	4	26	11	4	55
통영시	3	3	0	36	2	34	5	3	47
거제시	6	2	4	27	0	27	5	5	43
함양군	3	2	1	26	1	25	7	5	41
사천시	5	5	0	27	2	25	3	4	39
산청군	7	4	3	21	0	21	7	4	39
함안군	9	4	5	12	4	8	7	5	33
밀양시	4	2	2	13	3	10	8	6	31
하동군	6	5	1	14	3	11	7	4	31
창녕군	2	2	0	13	1	12	9	3	27
고성군	6	3	3	8	5	3	7	4	25
합천군	1	1	0	11	1	10	12	1	25
의령군	2	1	1	6	0	6	3	0	11

주 : 전국 자활기업에는 광역 및 전국 자활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광역자활기업 2개를 포함.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현황(2019.12월 말 기준), 협동조합설립현황(2020.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세부현황(2019.6월 말 기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기업현황(2020.1.31.일 조회).

●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수 비교

-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충족 사회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규모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경남은 사회적경제기업 수를 놓고 봤을 때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6.5%의 인구 비중, 5.8%의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경제기업 수를 보면 경남은 33.1개로 인천(27.0개)과 경기(31.5개) 다음으로 낮음

〈표 4-2-10〉

사회적경제기업
규모 비교

구분	사회적경제기업 수(개)					인구 (천명)	GRDP (조원)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경제기업 수 (개/10만명)
	합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전국	23,744	3,901	17,037	1,592	1,214	51,850	1,900	45.8
서울 (비율)	4,866 (20.5)	690	3,930	96	150	9,729 (18.8)	422 (22.2)	50.0
경기 (비율)	4,177 (17.6)	672	3,137	183	185	13,240 (25.5)	474 (24.9)	31.5
전북 (비율)	1,556 (6.6)	237	1,103	110	106	1,819 (3.5)	51 (2.7)	85.5
전남 (비율)	1,370 (5.8)	202	921	161	86	1,869 (3.6)	76 (4.0)	73.3
강원 (비율)	1,355 (5.7)	240	920	122	73	1,542 (3.0)	47 (2.5)	87.9
경북 (비율)	1,289 (5.4)	256	792	131	110	2,666 (5.1)	109 (5.7)	48.4
부산 (비율)	1,189 (5.0)	196	831	78	84	3,414 (6.6)	90 (4.7)	34.8
경남 (비율)	1,112 (4.7)	178	730	120	84	3,363 (6.5)	111 (5.8)	33.1
광주 (비율)	1,110 (4.7)	135	857	61	57	1,456 (2.8)	40 (2.1)	76.2
충남 (비율)	1,047 (4.4)	149	705	134	59	2,124 (4.1)	118 (6.2)	49.3
대구 (비율)	978 (4.1)	145	699	89	45	2,438 (4.7)	57 (3.0)	40.1
대전 (비율)	880 (3.7)	136	669	53	22	1,475 (2.8)	41 (2.2)	59.7
충북 (비율)	843 (3.6)	169	526	88	60	1,600 (3.1)	70 (3.7)	52.7
인천 (비율)	797 (3.4)	207	489	56	45	2,957 (5.7)	88 (4.7)	27.0
울산 (비율)	503 (2.1)	136	304	44	19	1,148 (2.2)	76 (4.0)	43.8
제주 (비율)	461 (1.9)	128	277	36	20	671 (1.3)	20 (1.0)	68.7
세종 (비율)	211 (0.9)	25	147	30	9	341 (0.7)	11 (0.6)	62.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현황(2019.12월 말 기준), 협동조합설립현황(2020.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세부현황(2019.6월 말 기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기업현황(2020.1.31.일 조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19.12월 기준), 통계청 지역소득(2018년 잠정치).

2) 민생경제 현황

(1) 경제성장률 하락

● 경상남도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 경상남도 경제성장률은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평균 0.5%에 불과
- 같은 기간 국가 경제성장률의 평균이 3.0%였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낮은 수준
- 특히 최근 2017년에는 -0.7%, 2018년에는 0.4%의 성장률을 기록해 2016년 실질 GR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표 4-2-11〉

실질 경제성장률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P)
경남 경제성장률	3.0	2.6	0.5	0.4	1.7	0.7	-0.7	0.4
국가 경제성장률	3.7	2.4	3.2	3.2	2.8	2.9	3.2	2.7

주 : 2018년도 지역소득은 잠정치.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한국은행 국민계정.

(2) 가계경제 악화

●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 정체 및 감소

- 경상남도 전체 노동소득의 실질증가율은 2016년 이후 대폭 하락하였고, 자영업자 소득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경상남도 노동자 1인당 명목소득¹³⁾은 최근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치보다 낮아졌으며, 자영업자 1인당 명목소득¹⁴⁾은 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5년 이후 크게 하락·정체되어 그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2016년 이후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

13) 피용자 보수를 임금근로자 수로 나누어 구한 수치.

14)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의 영업잉여를 자영업자 수로 나누어 구한 수치.

〈표 4-2-12〉

가계소득 변화 추이

(단위 :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P)
실질 증가율	노동소득	경남	5.0	3.5	4.9	5.1	4.3	1.9	0.4
		전국	5.3	3.6	4.4	4.5	3.5	2.7	2.5
	자영업자 소득	경남	-3.2	1.3	2.3	4.7	-1.3	-0.5	-1.5
		전국	-4.0	0.8	1.0	1.7	-1.8	1.1	-1.2
1인당 명목 소득	노동소득	경남	33,543	35,416	36,815	37,444	39,038	41,518	42,124
		전국	34,247	35,302	36,339	37,113	38,725	40,014	41,423
	자영업자 소득	경남	14,810	15,086	15,564	17,212	17,519	16,455	15,586
		전국	18,706	18,752	19,349	19,790	20,394	21,061	21,046

주1 : 2018년도 지역소득은 잠정치.

주2 : 노동소득은 파용자 보수, 자영업자 소득은 개인(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주3 : 실질증가율은 명목수치에 지역별 디플레이터(= 실질 GDP/명목 GDP)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주4 : 1인당 지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 소득과 자산 정채 및 감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 가계의 평균 경상소득이 정채된 가운데, 순자산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가계의 평균 경상소득이 2017년 5,478만원에서 2019년 5,828만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경남은 5,168만원에서 5,187만원으로 거의 정채되었음
- 전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2017년 3억 1,572만원에서 2019년 3억 5,281만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경남은 2억 6,502만원에서 2억 5,244만원으로 감소하였음

〈표 4-2-13〉

가계의 평균 경상소득
및 자산과 부채

(단위 :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경남	경상소득	5,168	5,095	5,187
	자산	32,643	33,042	32,049
	부채	6,141	6,728	6,804
	순자산액	26,502	26,314	25,244
전국	경상소득	5,478	5,705	5,828
	자산	38,671	42,036	43,191
	부채	7,099	7,668	7,910
	순자산액	31,572	34,368	35,281

주 :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31일 기준이며, 소득은 조사 전년도 1.1~12.31(1년간) 소득임.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3) 소비 등 내수경기 악화

● 소비위축

- 경남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실질 증가율은 2016년 이후 급격히 하락해 전국적인 수준을 지속해서 하회하고 있음

〈표 4-2-14〉

민간최종소비지출
실질 증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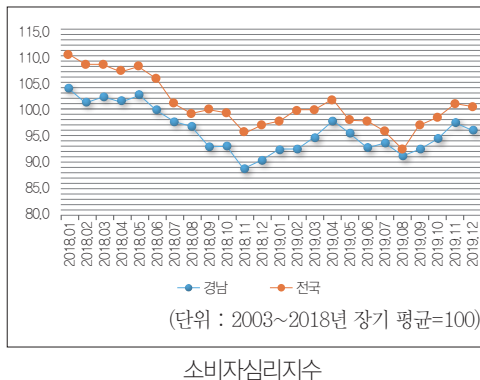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P)
경남	3.4	1.9	3.5	2.3	2.5	1.9	1.8	1.7
전국	2.7	1.7	2.2	1.7	2.0	2.5	2.9	2.7

주 : 2018년도 지역소득은 잠정치.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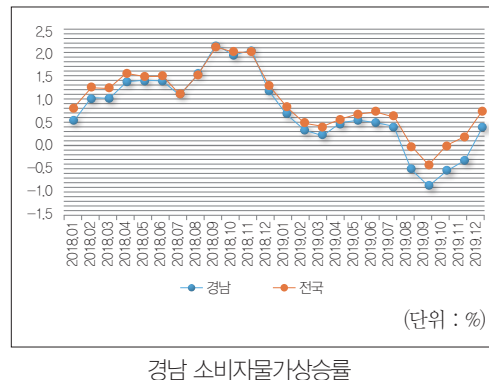
-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는 2018년 6월 이후 지속해서 100을 하회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들이 최근 경기상황을 과거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4-2-1〉

소비자심리지수 및
경남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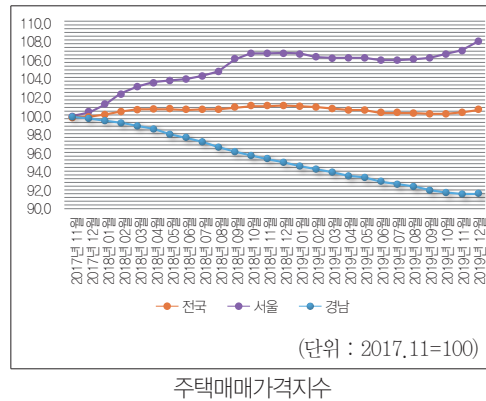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부동산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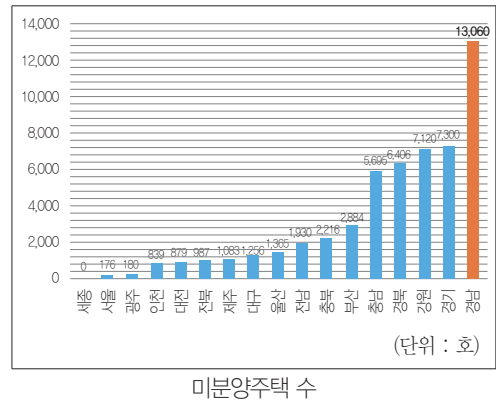
- 최근 경상남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기준시점(2017.11월) 대비 약 8.2% 하락
- 같은 기간 서울은 8.0% 상승, 전국적으로는 0.7% 상승
- 2019.1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경남이 13,060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전국 미분양 주택 53,561호의 24.4%가 경남
- 창원(5,845호), 거제(1,747호), 김해(1,694호), 통영(1,515호) 등에 미분양 주택 집중

〈그림 4-2-2〉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미분양주택 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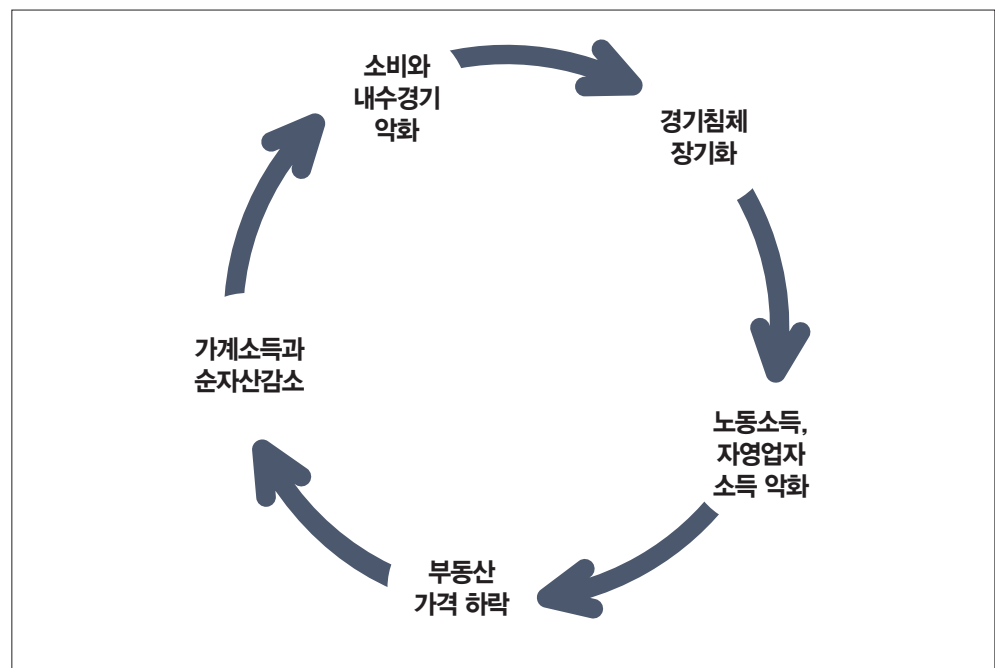
미분양주택 수

자료 :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4) 소결 : 경남 민생경제 상황 요약

- 제조업 주력산업 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 여파가 가계경제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상황
- 경남의 민생경제 상황을 요약하면, '산업경기 악화에 따른 노동소득과 자영업자 소득의 상대적 위축과 전반적 가계소득의 상대적 감소 및 정채 +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가계 순자산 감소에 따른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 →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 경기침체 장기화 → ...'의 악순환

〈그림 4-2-3〉

경남 민생경제
상황 요약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4차 산업혁명 본격화

(1) 산업의 고도화

● 신기술 융합 산업의 확산

- ICT, IOT, Big Data, AI 등 신기술 융합으로 제조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제조업 연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확산 전망
- 전통 제조업 생산 양식과 생산품으로 더는 기업의 생존이 어렵게 될 것
- 전통 제조업의 상당 부분은 중국 등 후발 국가와의 가격경쟁으로 쇠퇴할 가능성 큼
- 경남 전체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사업체가 산업의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장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중요

●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 제조업 생산 공정 고도화로 지금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전통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신기술 습득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 가구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기회가 줄어들 우려
- 고부가가치 산업 종사자와 여타 단순 서비스업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소득 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

(2) 일자리의 개념 전환

● 고용계약 관계의 다양화

-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체결하는 전형적인 장기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순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관계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
- 새로운 유형의 노동 보호 및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 구직수단으로서 창업

- 다양한 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소규모 창업이 일상화되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를 찾는 보편적 방법의 하나가 될 가능성
- 도민들이 창업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민생경제

(1)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사회서비스 공백 또는 부족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자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정착할 가능성
- 공동체 형성과 복원, 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민생경제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게 될 것
- 사회서비스 공급 노동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수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분의 자원 공급 및 역할 모델 수립 필요

● 사회적경제 확산

-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연대와 협력, 민주성 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
- 시장과 정부 부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자리 부족,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 해결과 미충족 사회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민생경제의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것

● 기업의 공유 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일반화

-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윤 추구 행위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들이 가진 가치사슬과 연관된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병행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음¹⁵⁾
- 이는 민생경제를 구성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경영 전략이 보편화 될 가능성이 큼

● 친환경 경제모델 확산

-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모든 경제주체가 추구해야 할 필수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
-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보편화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 배분이 증가하고, 환경 관련 산업과 사업모델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자원의 낭비적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모델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임

15) Porter, Michael, and Mark R. Kramer(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PP.62~77.

(2) 경제주체 간 상생 확산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 미래에는 가격경쟁을 넘어 가치의 경쟁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치의 경쟁 시대에는 대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중소기업을 쥐어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 창출을 위한 상생과 협력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대·중소기업 상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기업과 노동조합, 소비자,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 생산자와 소비자, 사용자와 노동자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시민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의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상생협력의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민생경제 부문 핵심지표

〈표 4-2-15〉

민생경제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실질 경제성장률	0.6%	2.0%	2.0%
가계 경상소득(월 환산)	5,187만원(432만원)	7,180만원(598만원)	9,649만원(804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수	사회적기업 179개 협동조합 730개	사회적기업 300개 협동조합 1,500개	사회적기업 500개 협동조합 2,000개

(1) 종사자 300명, 매출 300억 이상 사업체 300개 육성

①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 ICT,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민생경제 부문 핵심지표경남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중장비 산업에 대한 편중이 심각하고, 서비스업 역시 주로 도소매, 숙박 음식 등 단순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민생경제 부문 핵심지표ICT, 소프트웨어 등 첨단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기존 제조업과 융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음

●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반 조성

•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도와 대기업의 공동 펀딩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기술을 참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 연합 연구중심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인력 공급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을 통해 대학원 운영
- 대학원에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재로 양성되어 중소기업에 취업

② 중소기업 성장 지원

● 금융과 경영 원스톱 지원

• 지역 기반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금융기관별 전담 중소기업을 매칭하고, 자금 지원과 함께 투자 및 경영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

-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지방정부-금융기관-중소기업 파트너십 형성

●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동남권 우수중소기업 상품 전시회 정례 개최

• 민관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광고, 마케팅 채널 구축

- 경남 중소기업 상품 지도를 포함한 홈페이지 구축, 경남 중소기업 상품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경남 중소기업 연합 SNS 채널 구축 등

(2) 노동자 보호와 창업 활성화

①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관계 확산에 대비한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 실업급여 대상 확대

- 플랫폼 노동자가 질병, 이직 준비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마련
-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기존 제도 안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업 부조에 준하는 지원방안 마련

● 노동자 소득 안정 지원

- 플랫폼 노동자 등 소비자 수요에 따라 노동소득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처한 노동자가 늘고 있는 만큼, 매월 노동자 소득수준이 큰 변동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 또는 상호부조 제도 설계

② 창업 지원

● 소규모 회사 창업 지원 복합 단지 조성

- ICT 발전과 스마트폰, SNS 사용자 확산에 따라 대규모 장비나 시설 없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 창업이 가능해짐
- 소규모 회사의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합 단지 조성 검토
- 소규모 오피스 임대는 물론 촬영 장비 등 창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지원 등

● 사내벤처 활성화

- 일반 창업과 비교해 사내벤처의 성공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 기업의 사내벤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3) 사회적 자본 확산

① 사회적 가치 원칙 확립

● 사회적 가치 지향 도정원칙 수립

- 도정이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있어 경제적 이윤과 함께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과 조직, 사람을 우선 지원하는 원칙 천명

② 사회서비스 확대

● 사회서비스 공백 최소화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대상 계층 등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업에 대해 추가 지원 제공 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 기준 확립
- 처우 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수료 인상이 서비스의 보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공공자원 투입 기준을 함께 마련

③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혁신활동 지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실험실을 읍면동 기초 행정 단위별로 갖추고, 사회혁신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사회혁신활동에 기초한 창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공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공모 및 지원, 정보공유, 제품 판매 및 홍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개방형 업무 시스템(또는 플랫폼) 구축
- 투명하고 편리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④ 참여와 상생 지원

● 상생의 경영문화 확산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노사, 대·중소기업 상생 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노사, 대·중소기업 상생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인정을 확대
 -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고 그 성과를 공유
 - 민간 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경영정보 공유 확대부터 단계적으로 상생의 경영문화 확산 도모
-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가해 및 피해 사실 등을 공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 인센티브를 제약

● 참여 확산을 위한 신뢰 형성

-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효능감을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민 참여의 성공사례 확산
 - 시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성공 사례 구축

(4) 가계소득 향상

① 노동소득과 자영업자 소득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향상

● 노동소득 향상 지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현장에서부터 확립하고, 비합리적 임금 차별을 해소
-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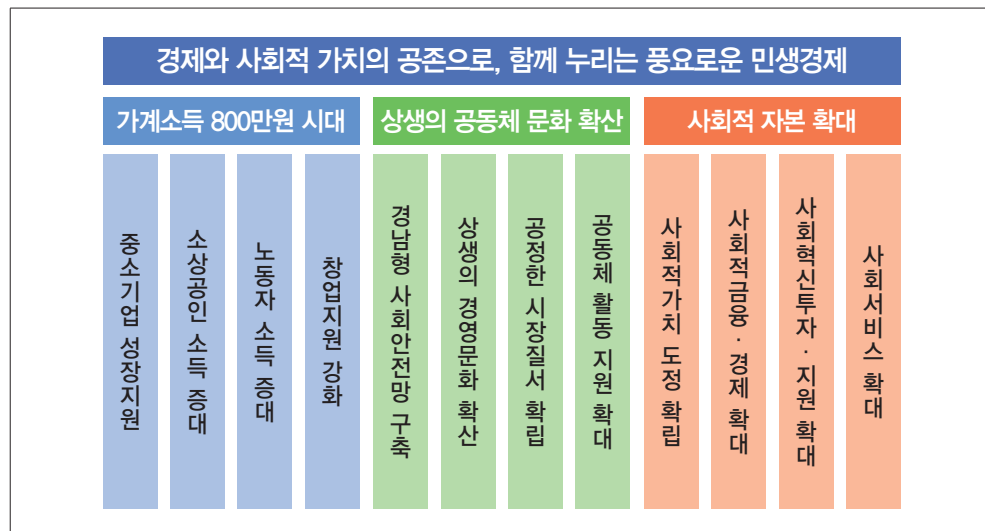
● 자영업자 소득 향상 지원

- 가게의 필수경비 절감 등 가게 처분가능소득 향상과 민간소비를 지원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 매출 확대와 소득 증진 도모
- 도시재생과 제로페이 확산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하여 소득 증진을 지원

4. 추진시책

〈그림 4-2-4〉

민생경제 시책
추진방향



1) 가계소득 800만원 시대¹⁶⁾

(1) 중소기업 성장지원

● 동남권 중소기업혁신기술원(이하 '기술원') 설립¹⁷⁾

- 개별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독자적으로 나서기에는 연구개발투자 여력 부족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집합적 협력체 구성 필요
 - 경남의 독자적 기구로 설립하기보다는 동남권 광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
- 기술원은 중소기업(단체)과 대기업은 물론 연구기관, 대학,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 성격의 연구기관으로 설립

16)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가게의 평균 경상소득은 연간 5,187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32만원임. 향후 20년간 매년 경남 가게의 평균 경상소득이 약 3.1% 성장할 경우 2040년 가계소득 800만원 달성 가능.

17) 김유현 외(2019), "경남 경제 및 고용상황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 경상남도 「경남형 일자리모델 개발」사업 최종 보고서.

- 덴마크 제조아카데미(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MADE) 벤치마크
- MADE는 정부투자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경제단체가 자금을 조성하여 2014년 만든 제조업 혁신 지원기관으로, 현재 약 1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제조업 공정 자동화 등 덴마크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기술원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공정 및 기술 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교육 훈련, 기술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되, 가장 핵심은 대학과 연구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임
- 기술원이 선정하는 공모 사업의 주제는 친환경,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포용적 기술혁신 연구 프로젝트로 함
- 대학과 연구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과 연대, 협업과 융합을 전제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하고, 선정되는 경우 선정된 팀의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비용을 지원(대기업은 연구비용의 일부를 편당)
- 개발된 기술을 중소기업에 적용함으로써 생산품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으로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도 이익이 됨

●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채용 지원

- 대다수 연구개발 분야 인재들은 대기업과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분야 인재유치가 매우 어려움
-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주거 단지 또는 마을 조성
-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연구개발 인력이 입주를 원할 경우 주거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
- 동남권 중소기업 인재 유치 리크루팅(Recruiting) 지원
- 동남권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 리크루팅 활동 추진
- 리크루팅 행사 기획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경남도, 부산시, 울산시가 함께 지원
- 동남권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건립, 공동 판로 확대 사업 추진
- 동남권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건립을 통해 우수제품 홍보 및 IR 행사 등 상설 운영
- MICE 산업 연계, 동남권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관람을 동남권 비즈니스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
- 동남권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을 활용한 바이어 초청 설명회 및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미래 신산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친환경에너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 육성대상 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미래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투자 또는 기업 유치 세제 혜택을 넘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

• 미래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미래 신산업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
- 단순한 이자 차액 보전 형태가 아닌 (준)지분투자 형태로 지원하여 투자의 리스크를 중소기업과 경남도가 공유해 미래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장기 기술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도모

(2) 자영업자 소득 증대

● 제로페이를 넘어 지역 화폐로

• 경남도 지역 화폐 도입, 지불수단 다변화

- 경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장비 생산기지로 생산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도내의 소득으로 머물러 소비되지 못하고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유출
- 지역경제의 순환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도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절실히 필요
- 지류 상품권, 경남도 소비전용 체크카드, 제로페이 등 다양한 지불수단을 통해 도내 소비, 특히 골목상권 매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남 지역 화폐 도입
-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지급 수단을 지역 화폐로 전환하고, 그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단위 : 천원)

〈표 4-2-16〉

1인당 생산, 분배소득, 민간소비 금액

구분	1인당 생산		1인당 분배소득		1인당 민간소비	
	시도	금액	시도	금액	시도	금액
	전국	36,817	전국	19,894	전국	17,536
1위	울산	65,515	서울	23,259	서울	21,214
2위	충남	53,995	울산	21,666	울산	18,001
3위	서울	43,525	세종	20,611	광주	17,752
4위	충북	43,028	경기	19,851	부산	17,585
5위	전남	42,713	광주	19,804	대전	17,468
6위	경북	40,766	대전	19,749	경기	17,176
7위	세종	36,592	부산	18,917	대구	17,121
8위	경기	36,362	인천	18,626	세종	16,844
9위	경남	32,938	대구	18,585	제주	16,545
10위	강원	30,893	경남	18,479	강원	16,500
11위	제주	30,506	강원	18,472	인천	16,013
12위	인천	30,076	충남	18,472	경남	15,991
13위	전북	28,002	제주	18,469	충남	15,790
14위	대전	27,135	충북	18,427	경북	15,776
15위	광주	26,660	경북	18,319	전북	15,654
16위	부산	26,390	전북	18,291	전남	15,533
17위	대구	23,132	전남	18,053	충북	15,506

주 : 2018년도 지역소득은 잠정치.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 한계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을 경남 사회서비스화

-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 그중에서도 경남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더 높은 상황¹⁸⁾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미성숙하고, 기초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취업이 여의치 않은 고령층의 다수가 자영업에 진출
 - 조선업 등 산업위기에 따른 실업 증가로 실직자 가구의 생계형 창업 증가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생계로 인해 쉽게 폐업하지 못하는 문제
 -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경제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활성화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그 비용을 경남도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경남의 사회서비스로 제공

● 폐업 자영업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경영컨설팅과 연계

- 경영컨설팅을 통해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병행, 임금근로자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자기 계발 지원, 시장 일자리 연결 서비스, 공공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공급 확대 등 취업 지원 강화

(3) 노동소득 증대

● 「(가칭)경상남도 임금공정성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

-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원칙을 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극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
 -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있는 경우 경남도의 투자 및 금융 등 지원에 있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도입

●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소득 지원 방안 도입

- 경남 생활임금 이하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임금 이하 노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

18)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은 우리나라 25.1%로 OECD 평균(28개국) 15.5%보다 10%p 가까이 높고, 경남은 2019년 상반기 기준 30.9%로 전국 자영업자 비중 24.9%보다 훨씬 더 높음.

(4) 창업지원 강화

● 동남권과학단지(기술 실용화 창업지원 집적단지) 조성¹⁹⁾

- 대학 내 연구 활동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 실용화 단계를 거쳐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동남권과학단지 조성
- 스웨덴의 리센핑 지역에 있는 마르데비 과학단지(Mjärdevi Science Park)는 1984년 설립된 세계적인 혁신단지로 4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 중 300여 개 기업이 지역의 거점 대학인 리센핑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창업 기업임
- 마르데비 과학단지의 성공 요인은 대학과 기업의 경계를 허물었던 것에 있음
- 동남권과학단지를 통해 동남권 거점 대학(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UNIST, 부산대, 부경대 등)의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와 기술 창업 도모
- 경남과학단지의 모든 시설을 거점 대학의 교수와 연구진,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과 연구, 창업, 생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 대학 연구팀을 예비 창업기업으로 선발하여 과학 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

● 청년 창업 활동 지원 강화

- 동남권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 부산, 울산, 경남도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회 수상자가 경남에서 창업할 경우 창업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금 모집을 위한 매칭 투자자금도 지원

● 사내벤처 성공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사내벤처는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창업 활동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창업에 비해 성공확률이 높음
- 경남 소재 기업이 사내벤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사내벤처를 통한 창업에 성공한 경우 모기업 투자자금의 일부를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하고 경남도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2) 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

(1) 경남형 사회안전망 구축

● 장기 실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취업 지원 제도 운영

- 실업급여 지급 기간 또는 국민취업제도 지원 기간이 종료된 도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ex. 3개월) 추가 취업 지원금 지급

19) 김유현 외(2019), “경남 경제 및 고용상황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 경상남도 「경남형 일자리모델 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고용보험의 최대 지급기한은 6~8개월로, 그 안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실망실업자로 취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
- 청년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 역시 지원 기간은 6개월에 불과
- 취업 지원이 종료된 도민이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추가로 취업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생계안정과 경제활동 참여의 지속성을 확보(실망실업 예방)

●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 경남도 자체 공공부조제도 마련

-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정부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매월 5~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경남형 공공부조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추진

(2) 상생의 경영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상생경영 문화재단 설립 추진

- 경남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단체, 노동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경영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상생경영 문화 확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경남도가 재단 사업비 중 일부를 출연하여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함
- 예를 들면 경영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의 기업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휴직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 또는 해고 노동자 재고용 및 전직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간, 노사 간 상생 도모

● 노사 상생 경영문화 확산

- 노동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확대 및 이사회 참관 제도 등 노사 상생 경영문화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 종업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또는 노동자에 대한 스톡옵션 등 주식 배분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실효적 운영

- 경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사례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와 MOU 체결 등 적극적 협력을 통해 상담사례 중 불공정성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고, 상담센터가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적 자본 확대

(1) 사회적 가치 도정 확립

● 사회적 가치 도정 원칙 확립 및 비전 선포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준하는 사회적 가치 지향 경남도정 원칙 수립 및 '경남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 조례' 제정
- 도정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사회적 가치 도정 원칙을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사업 또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도 분명한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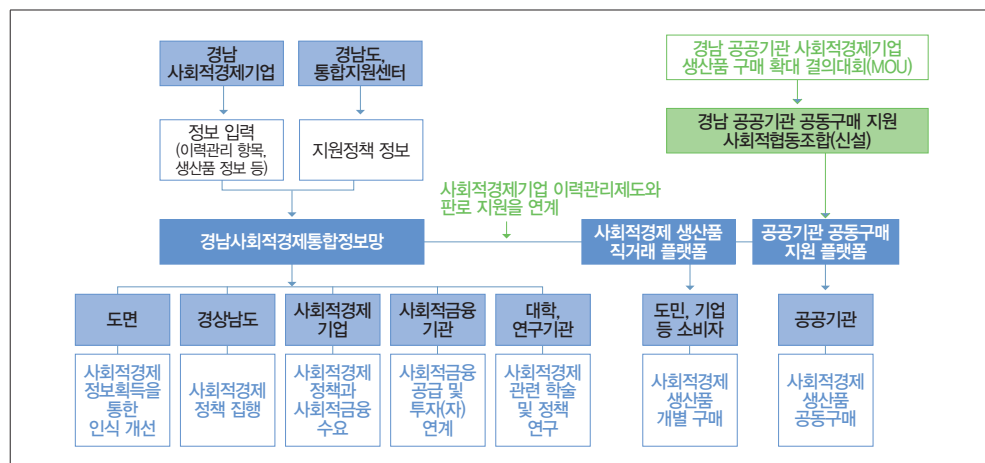
(2) 사회적경제 · 금융 활성화

● 경남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의 흐름
- 지금까지는 활동가 양성, 인건비 지원 등 인적자원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정보와 금융자원이 사회적경제 분야로 원활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정보의 원활한 흐름 없이는 인적자원과 금융자원이 사회적경제 분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정책 정보와 소비자,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가 통합 제공되는 플랫폼을 구축
- 통합지원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그 자체로 인적 · 물적 · 제도적 자원은 물론 판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2-5〉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안)



자료 : 김유현(2020),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운용방향", 경남연구원 현안과제.

●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의 사회적금융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기금을 경남도 출연금을 바탕으로 조성

-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내 자본 공급을 1차 목표로 하되, 경남에서 사회적금융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새로운 형태의 금융지원 시도 등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

● 사회성과 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사업) 도입 검토

- SIB사업은 민간 투자자금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사회성과 창출 및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임
- 사회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경남의 상황을 고려할 때 SIB사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SIB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자금 조달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도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SIB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공공 부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도 내에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²⁰⁾

(3) 사회혁신 · 공동체 활동 지원 강화

● 「경남 사회혁신활동가 수당 지원 조례」 제정 검토

- 사회혁신활동을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보고, 농촌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나서는 사회혁신활동가에 대한 수당 지급 제도 도입

● 경남형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

- 경남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및 생활SOC사업은 반드시 공동체 회복 사업을 병행토록 의무화하고, 공동체 회복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추진토록 함
- 도시재생 또는 생활SOC사업과 별개로 공동체 회복 사업을 단독으로 공모하여 공동체 복원 사례를 확대하고 이를 공유함

(4) 사회서비스 확대

● 사회서비스 확대

- 사회서비스 확대는 서비스 수요자인 도민들의 삶의 질 확대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사회적 요구가 있으나 시장을 통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부터 공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도모

20) SIB사업은 미래의 재정지출 절감과 재정 효율성 증진, 협력과 혁신을 통한 더 나은 사회성과 달성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재정의 중복투자, 과도한 금융비용 지출, 제3 부문의 다양성 훼손, 공공부문의 민주성과 책임성 약화 등 우려도 있음(김유현(2020),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경남연구원 현안과제 발간 예정).

제2절

일자리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노동시장

● 실업자 수의 빠른 증가와 정체된 고용률

- 2018년 기준 경남의 1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2,845천명, 경제활동인구는 1,801천명으로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0.9%, 1.5% 증가 추세
- 취업자 수는 2018년 1,746천명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1.3%씩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는 2016년 59천명으로 급등하며 동기간 동안 9.7%씩 빠르게 증가

(단위 : 천명, %)

〈표 4-2-17〉

경상남도
주요 경제활동지표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계	취업자	실업자			
2012년	2,689	1,649	1,618	31	61.3	60.2	1.8
2013년	2,719	1,676	1,641	35	61.6	60.3	2.1
2014년	2,758	1,702	1,660	43	61.7	60.2	2.5
2015년	2,791	1,736	1,691	46	62.2	60.6	2.6
2016년	2,812	1,763	1,704	59	62.7	60.6	3.3
2017년	2,830	1,775	1,723	52	62.7	60.9	2.9
2018년	2,845	1,801	1,746	54	63.3	61.4	3.0
연평균 증가율	0.9	1.5	1.3	9.7	0.5	0.3	8.9

자료 :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주요경제지표(2020.1월 기준)

● 주력 제조업 산업의 위기와 기존 구조조정의 한계

- 경남의 산업구조는 조선, 기계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등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최근 주력제조업의 위기가 지역의 심각한 고용 위기를 가져오고 있음
- 경남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산출액 10억원당, 2016년 기준)는 9.1명으로 서비스업(20.2명)의 절반 수준이며, 부산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 고용 흡수력 낮은 상황임

(단위 : 명)

〈표 4-2-18〉

경남지역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운송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금융·보험	전문, 과학 및 기술	사업지원	보건·사회 복지
경남	9.1	20.2	26.0	23.4	29.0	14.2	14.9	26.9	21.6
부산	11.0	18.8	21.3	14.7	25.8	12.5	17.8	36.7	18.7
울산	6.9	18.0	21.8	11.4	25.4	13.1	12.5	29.7	19.4

주 : 취업유발계수란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정품목 최종수요 10억원이 전 지역·전 산업에 유발하는 취업자 수.
 자료 : BNK동남권연구센터(2018),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p.10.

● 제조 관련 직종의 지속적 감소와 서비스업의 빠른 증가

- 제조업 주요직종인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전국과 달리 감소(연평균 -0.2%)해왔고 서비스·판매종사자(2.4%), 단순노무종사자(6.4%)는 전국보다 빠르게 증가
- 경남의 직업구조는 사무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조작·조립직종 일자리 감소하고,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일자리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 전국은 관리자·전문가, 서비스·판매종사자 일자리 동반 증가하는 경향과 차별적임

(단위 : 천명, %)

〈표 4-2-19〉

경남지역 직업별
취업자 변화

구분	경남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감률		경남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13년 대비 증감	
	2013년	2019년	경남	전국	2013년	2019년	경남	전국
계	1,666	1,767	1.0	1.1	100.0	100.0		
관리자, 전문가	291	297	0.3	1.6	17.5	16.8	-0.7	0.7
사무종사자	258	233	-1.7	1.6	15.5	13.2	-2.3	0.5
서비스·판매종사자	331	382	2.4	1.2	19.9	21.6	1.8	0.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2	175	-0.7	-1.5	10.9	9.9	-1.0	-0.9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424	419	-0.2	0.2	25.5	23.7	-1.7	-1.1
단순노무종사자	181	263	6.4	1.8	10.9	14.9	4.0	0.5

자료 : KOSIS,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기준).

● 김해, 양산 노동시장 규모 확대, 통영, 고성, 의령, 합천 노동시장 축소

- 김해, 양산은 경남 내 생산거점 기능 강화되고 있는 추세
 - 13년 대비 김해시 취업자는 3.4만(14.2% 증), 양산시 3.9만(29.6%) 증가함
 - 거주지 외 통근 취업자 비중이 19년 기준 26% 수준으로 높고 김해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새로운 일자리 확대에 노동시장 규모 커지고 있음을 의미
 - ※ 역외 통근자 비중 : 김해 13년 22.8% → 19년 26.6%, 양산 13년 25.6% → 19년 26.3%
- 통영, 거제는 2014~15년 조선·기계산업 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회복 축소·정체
- 의령, 고성, 합천은 2013년 이후 노동시장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음
 - 고성은 제조업 취업자 수 급감(13년 8.6천명→19년 3.9천명) 뿐만 아니라 농림어업 종사자 수 감소(14년 13.9천명 → 19년 10.3천명) 감소가 주요 원인
 - 농림어업 집중지역(취업자 비중 50% 상당)인 의령 및 합천의 경우 빠른 인구고령화와 함께 농어업인구 감소, 대체 산업의 성장 부진에 따른 노동시장 전반 침체가 주요 원인
- 양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30~40대 취업자 수 감소 중임
 - 13년 이후 연평균 3% 이상 취업자 급감한 지역은 합천, 산청, 하동, 고성 등 총 8개

(단위 : 천명, %)

〈표 4-2-20〉

경남 시군별
취업자 변화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13년 대비 증감	
					증감 수	증감률
창원시	510.0	509.8	514.9	530.0	20.0	3.9
진주시	165.7	174.4	169.4	175.6	9.9	6.0
통영시	68.4	67.2	61.8	63.0	-5.4	-7.9
사천시	60.1	59.4	58.9	60.6	0.5	0.8
김해시	238.7	255.8	266.0	272.5	33.8	14.2
밀양시	54.8	54.8	53.8	55.4	0.6	1.1
거제시	126.8	137.8	123.4	125.9	-0.9	-0.7
양산시	132.2	148.0	158.6	171.3	39.1	29.6
의령군	17.6	17.6	16.6	15.7	-1.9	-10.8
함안군	36.5	37.3	34.1	34.5	-2.0	-5.5
창녕군	35.4	37.2	34.4	36.6	1.2	3.4
고성군	33.3	31.2	30.3	28.7	-4.6	-13.8
남해군	27.0	28.5	25.8	26.0	-1.0	-3.7
하동군	26.5	28.5	25.1	26.8	0.3	1.1
산청군	20.9	21.4	21.2	21.4	0.5	2.4
함양군	23.7	23.6	22.3	22.3	-1.4	-5.9
거창군	32.4	34.3	32.6	34.8	2.4	7.4
합천군	29.0	27.7	25.4	25.0	-4.0	-13.8

자료 : KOSIS,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기준).

(단위 : 천명, %)

〈표 4-2-21〉

경남 시군별
30~40대
취업자 변화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13년 대비 증감
전국	12,716	12,683	12,436	12,014	-0.9
경남	845	818	784	775	-1.4
창원시	265.4	247.2	250.4	241.1	-1.6
진주시	78.3	80.0	79.0	75.4	-0.6
통영시	33.1	33.8	28.9	28.9	-2.2
사천시	27.4	26.8	24.1	24.2	-2.0
김해시	139.5	142.6	139.3	133.4	-0.7
밀양시	21.2	19.7	18.6	17.3	-3.3
거제시	69.8	74.8	69.4	68.3	-0.4
양산시	74.4	79.0	82.5	85.8	2.4
의령군	5.2	4.9	4.1	3.9	-4.7
함안군	16.0	15.8	14.7	13.5	-2.8
창녕군	12.0	12.1	11.2	11.1	-1.3
고성군	11.8	11.1	10.0	8.8	-4.8
남해군	7.7	7.3	6.6	5.9	-4.3
하동군	8.4	8.2	7.0	6.2	-4.9
산청군	6.1	5.6	5.3	4.4	-5.3
함양군	7.7	7.0	6.3	5.9	-4.3
거창군	11.8	11.7	11.1	10.8	-1.5
합천군	8.2	7.4	6.3	5.5	-6.4

자료 : KOSIS,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기준).

● 기업 규모별 노동여건의 격차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심화

- 경남 제조업 하청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근로 여건, 산업안전, 기업복지 수준이 열악함
- 경남 소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26,387원인 반면 중기업은 15,624원, 소기업은 12,893원임. 대기업 대비 소기업의 시간당 임금은 52.9% 수준
- 경남의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인근 지역인 부산, 울산 및 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임. 이는 경남 청년이 취업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근로 여건을 제공해주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단위 : 원, %)

〈표 4-2-22〉

경남지역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임금 격차(대기업=100)

구분	소기업 임금수준(대기업=100)				2016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격차(B/A)	대기업(A)	중기업	소기업(B)
경남	50.7	45.5	51.0	48.5	52.9	26,387	15,624	12,893
부산	70.2	71.7	58.6	59.6	62.9	23,333	17,569	13,328
울산	50.6	51.2	53.2	48.3	57.0	29,296	20,154	13,733
전국	54.5	52.1	50.4	48.5	51.7	28,746	17,676	13,407

주 : 소기업은 20인 미만, 중기업은 30~299인,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자료 : 고용노동부(2017), 동남권 지역고용실천전략(권역), p.49, 〈표 3-10〉, [그림 3-4] 재구성.

● 높은 성별 임금 격차와 고학력 여성 노동시장 참여 저조

- 경남의 여성 노동시장 특징으로 높은 비경제활동참여율과 남성대비 낮은 임금수준을 들 수 있음
- 경남지역 여성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2016년 기준 남성 대비 61.3%로, 2012년
- 59.1%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전국 평균 64.6%에 비해 여전히 그 격차는 큰 편임
- 제조업이 발달한 울산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부산지역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경남의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원인은 경남의 노동시장이 남성 중심 제조업 일자리가 집적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 적합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취약한 구조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단위 : 원, %)

〈표 4-2-23〉

경남지역 성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임금 격차
(남성=100)

구분	여성 임금수준(남성=100)				2016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격차(B/A)	남성(A)	여성(B)
경남	59.1	59.1	59.3	60.1	61.3	18,019	11,041
부산	66.3	67.1	65.0	65.0	63.4	18111	11478
울산	51.9	51.7	59.6	58.8	57.9	21371	12383
전국	64.8	64.5	64.1	63.8	64.6	19,476	12,573

자료 : 고용노동부(2017), 동남권 지역고용실천전략(권역), p.46~47, 〈표 3-8〉, [그림 3-2] 재구성.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핵심층의 감소

- 청년층의 지속적인 감소, 지역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30~54세 주력 생산인구 감소 추세
- 경남지역 연령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7년 총인구는 3,038천명으로 2017년 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0%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핵심노동인구라 할 수 있는 25~49세 인구는 청년층(25~49세)의 급격한 감소(-53.5%)로 전체 인구의 21.2%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2047년 전체인구의 41.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청년층의 일시적 과잉공급 문제에 따른 취업난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역 내 주력 생산인구의 고용축진 및 생산성 향상, 여성 및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문제가 더욱 중시될 필요

(단위 : 천명, %)

〈표 4-2-24〉

경남지역 핵심 노동력
계층의 변화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구분	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47년	증감	증감률
총인구추계	3,339	3,350	3,321	3,197	3,038	-301	-9.0
중위연령	42.9	45.0	51.3	56.9	59.3	16.4%p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2,392 (71.6)	2,360 (70.5)	2,113 (63.6)	1,728 (54.1)	1,508 (49.7)	-884 -21.9%p	-37.0
핵심노동인구(25~49세) (비중)	1,231 (36.9)	1,175 (35.1)	976 (29.4)	800 (25.0)	645 (21.2)	-586 -15.7%p	-47.6
청년층(20~34세) (비중)	608 (18.2)	568 (17.0)	448 (13.5)	345 (10.8)	283 (9.3)	-325 -8.9%p	-53.5
신중년층(50~64세) (비중)	769 (23.0)	834 (24.9)	845 (25.4)	729 (22.8)	668 (22.0)	-101 -1.0%p	-13.1
고령층(65세 이상) (비중)	483 (14.5)	554 (16.5)	885 (26.6)	1,167 (36.5)	1,256 (41.4)	773 26.9%p	160.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S), 장래인구추계 시도(2017년 기준).

● 새로운 일자리 형태의 확산과 노동 관행의 변화

- 이동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기존의 제조·생산 사업체 중심의 고용 관계를 넘어서는 신규 고용 형태의 일자리 확산되는 추세
- 경남의 감정노동자 수는 약 51만 8천명으로 추정되며 서비스업의 발달로 향후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 수의 약 30.2%를 차지함. 2015년 대비 0.8%p 증가
 - 진주(36.1%), 통영(35.2%)은 전체 취업자 중 감정노동직업 종사자 비중이 특히 높음
- 기존 노동정책과 차별화된 관점의 신규 고용 형태 및 근로 관행 포괄 가능한 정책 필요

〈표 4-2-25〉

경남지역 시군별
감정노동자 종사자 수
('18년 하반기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경남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통영	사천	밀양	10개 군 지역
	2015년	2018년									
취업자 수(a)	1726.7	1715.1	528.7	272.5	169.0	168.9	120.4	63.3	61.4	55.7	275.2
감정노동자 수(b)	507.7	517.5	168.9	85.5	61.0	52.1	30.6	22.3	17.0	15.2	64.7
비중(b/a)	29.4	30.2	31.9	31.4	36.1	30.8	25.4	35.2	27.7	27.3	23.5

자료 : 경상남도(2019),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및 상담센터 운영방안.

● 기술진보와 생산공정의 변화에 따른 고용감소 위협요인 증가

- 경상남도 소재 사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은 2019년 10월 기준 총 1,457개 사(전국의 12.6%)로 2019년도에만 567개 사가 추가로 도입
-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은 제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고용감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인력의 직무 전환 관련 기술교육의 강화와 업무 재배치 등을 위한 노동참여형, 일터혁신을 중시하는 생산 현장의 기술도입 전략 필요

〈표 4-2-26〉

경남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월	합계
경남(a)	27	89	171	232	371	567	1,457
전국(b)	277	963	1,560	2,203	2,900	3,990	11,893
비중(a/b)	9.7	9.2	10.9	10.5	12.8	14.2	12.6

자료 : 경남연구원 · (사)경남고용포럼(2019.11.), '노동참여형 스마트공장 모델개발: 생산방식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참여' 토론회 자료집, p.39.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단기 성과중심 일자리사업 지양,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 개선 노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역 노동시장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성과관리체계 강화
 - 지역경제의 구조적·장기적·저성장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전략 강화를 위한 지역 주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경남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의 성과 제고
 - 산업-고용정책 간의 연계 강화와 지역 핵심 산업의 관철은 일자리 창출
 - 협력적 노사관계, 노동 참여형 제조혁신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감소 대응 및 질 제고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원·하청 불공정 거래근절, 일·생활균형의 근로 여건 조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산업 및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 정책 강화
- 새로운 고용 형태 및 고용여건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책 강화
 - 기술진보와 제조 생산방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

2) 추진전략

● 일자리 부문 핵심지표

〈표 4-2-27〉

일자리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고용률	61.3%	64.5%	70.0%
청년고용률(15~39세)	57.1%	61.0%	65.0%
산업재해율	6.15%	6.00%	5.70%

● 지역 일자리 정책 사업의 추진 성과관리체계 강화

- 경남 일자리 거버넌스 역량 및 18개 시군별 일자리 정책 기획 및 운영 강화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적 지원 강화
- 일자리사업 성과 점검 정례화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산업단지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전략산업 활성화와 인력수급계획에 밀착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노동자 참여형 스마트 제조혁신 변화 촉진

●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여건 개선

-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실현
- 일·가정양립 실천 및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경남 일·가정양립 종합계획 수립 및 일·가정양립 실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경남 중소기업 일자리 질 향상

- 이중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

●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미스매치 해소

- 지역 사업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숙련공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직능 전환 교육 훈련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 주요 전략산업 기업별 전문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노동여건 열악한 근로자,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 비정규직 직업능력 강화로 격차 완화
-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경남 농어촌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

- 경남 6차 산업의 로컬 브랜드화,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청년 농어업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및 승계 지원 프로그램 강화
- 4차 산업혁명 연계 등 6차 산업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지원

● 청년의 안정적인 직업 세계 정착 지원

- 청년의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및 안착과 역외 청년의 경남정착 지원 강화
- 산업 다양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 확대
- 창업·창직을 통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 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생애주기별 일자리 플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 경남형 여성친화 직종 발굴을 통한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
- 여성친화형 사회적경제기업 등 창업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확대 지원

4. 추진시책

(1) 지역 일자리 정책 사업의 추진 성과관리체계 강화

● 경남 일자리 거버넌스 역량 및 18개 시군별 일자리 정책 기획 및 운영 강화

- 경남 및 18개 시군별 산업-노동시장 구조의 특징과 지역 고용·노동 현안 완화에 특화된 지역 일자리 정책을 주도적으로 마련, 추진
- 지자체, 지방노동청, 지역대학, 지역노사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발굴 및 기획부터 성과평가단계까지 공동의 노력 추진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적 지원 강화

- 경력단절 여성, 5060 신중년 등 노동시장 재진입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의 교육 훈련, 상담 및 고용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전직 지원 정책 강화
-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매칭을 통한 생계취약형 노인의 일자리 확충

● 일자리사업 성과 점검 정례화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개별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와 정기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 강화

(2) 산업단지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청년, 여성도 일하기 좋은 쾌적한 산업단지 근무여건 조성

-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 여건, 근무환경, 산업안전·보건, 통근 접근성 개선·지원 강화

● 전략산업 활성화와 인력수급계획에 밀착한 일자리 창출 지원

- 경남의 주요 산업 고도화 및 전문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등
- 전공, 직능수준 반영한 ‘인력수급종합계획’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전략산업 대표기업의 실시간 일자리 모니터링을 통한 고용안정 대응 지원

● 노동자 참여형 스마트 제조혁신 변화 촉진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스마트산단 유치 등 스마트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혁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노동자 참여’ 중시 문화 촉진
- ‘일터의 스마트화’,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스마트화’ 위한 산업별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스마트공장 기업체 재직자 직무 전환 교육 훈련 및 미취업자 대상 스마트공정 생산·사무관리 직종 직업훈련 활성화

(3)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여건 개선

●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실현

-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업무 효율화 설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단축 근로 및 휴직자를 위한 대체 인력풀제 운영

● 일·생활균형 실천 및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경남형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친환경 공공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

●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경남 일·생활균형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 비정규직, 특고, 프리랜서 등 기업복지 사각지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마련
- 재직자 역량 강화 확대 지원(취미, 직업능력 향상 교육, 고졸 재직자 학위취득 등)

(4)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경남 중소기업 일자리 질 향상

● 이중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경상남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통해 지역 노동 현안 해소를 위한 파트너십 전략 강화
- 원-하청 표준거래계약서, 프리랜서 계약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

- 경남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조사 및 개선 방향 마련·지원
-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장 컨설팅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지역 단위 복지지원책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 원-하청 상생협력 개선을 위한 (가칭)상생협력 개선지원단 운영
- 고용여건 개선 성과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경남 노동시장 이중구조(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

(5)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미스매치 해소

● 지역 사업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숙련공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역 산업 수요 적합도 제고와 교육 질 향상 통한 효율성 제고

● 직능 전환 교육 훈련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 산업위기 업종 중소·영세 소기업 노동자의 동종 및 타업종 전직지원 매칭 강화

● 주요 전략산업 기업별 전문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6) 노동여건 열악한 근로자,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 비정규직 직업능력 강화로 격차 완화

-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산학연이 연계한 재직 훈련 지원 통한 정규직화
-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비정규직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강화 및 경남도 사업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내실 있는 상담, 교육, 연구 기능 강화
- 비정규직 일자리 근로실태(정규직 전환 등) 모니터링 실시,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7) 경남 농어촌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

● 경남 6차 산업의 로컬 브랜드화, 관광 상품화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기반 6차 산업 협동화 구축 및 6차 산업 기반 관광패키지 개발

● 청년 농어업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및 승계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가족경영 6차 산업체 지원
- 단기체류형 농어촌 삶터 체험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인식 변화와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연계 등 6차 산업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지원

- ICT 기반 농어업 분야의 6차 산업화 전환 희망 경영체 대상 경영지원 등

(8) 청년의 일자리 창출 확대

● 청년의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및 안착과 역외 청년의 경남정착 지원 강화

-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경남 청년의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창업 활성화 촉진
- 근로 여건 취약 청년(5인 미만 영세소기업, 비정규직 청년)의 사회안전망 확충
- 경남 소재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체 소재지' 기반 정책 발굴

● 산업 다양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 확대

- 신사업 분야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용흡수력·취업계수 높은 산업·직무를 청년 눈높이에 맞는 대표산업 지정·관리

● 창업·창작을 통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의 기술창업 적극지원과 개발된 제품 및 기술의 인수, 기업 성장 촉진 지원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스템 활성화

- 청년층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창구 일원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
- (가칭)청년통합고용정보망 운영 통해 정책 기초자료(고용·주거·생활·문화 등) 축적·활용

(9)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생애주기별 일자리 플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 임신·출산기, 자녀 육아 여성을 위한 단시간·유연근무 일자리 활성화
- 재취업 여성의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제도 활성화

● 경남형 여성친화 직종 발굴을 통한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

- 경남지역 산업에 맞춘 가족친화기업 확산, 여성친화 직종 발굴
- 기업 수요 맞춤형, 직무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의 내실화

● 여성친화형 사회적경제기업 등 창업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확대 지원